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8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조달에서 '수요기관'이라는 명칭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은?

- (1) 필요한 대상물의 수요를 제기하는 구매 측 기능
- (2) 시험성적서만 발급하는 제3자 기능
- (3) 모든 계약분쟁을 재판하는 법원 기능
- (4) 다른 기업의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공급 측 기능

2. 공공조달과 민간구매가 공유하는 상업적 특성은?

- (1) 최종 목적이 언제나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다.
- (2) 필요한 대상물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수반한다.
- (3)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공공계약법을 적용한다.
- (4) 재원이 언제나 국민의 세금이다.

3. 중앙조달기관의 조직과 담당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명칭상 중앙기관이면 모든 분야를 단독 담당해야 한다.
- (2) 한 국가에서 일반조달과 전문 분야 조달을 맡는 복수 기관을 둘 수 있다.
- (3) 국가가 달라도 법적 형태와 담당 범위는 동일하다.
- (4) 중앙조달기관은 자체 내부 구매 수요를 가질 수 없다.

4. 계약담당자가 구매방법 선택의 근거, 검토자료, 승인자를 기록해 사후에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 (1) 공급 독점성
- (2) 수요의 계절성
- (3) 규모의 경제
- (4) 책임성

5. 여러 수요기관의 공통 물품을 전문 조달기관이 모아 계약하고 각 수요기관이 공급받는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1)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공공조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민간 판매자가 스스로 계약규칙을 정하는 독점판매 방식이다.
- (3) 각 사업부서가 독립적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분산형의 전형이다.
- (4) 전문 조달기능을 집중해 여러 기관의 수요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6. 입찰공고는 널리 공개했으나 실제 견적 작성에 필요한 도면은 기존 거래업체에만 제공하였다. 일반경쟁의 실효성을 해치는 직접적인 사유는?

- (1) 입찰기회는 공개했어도 경쟁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 (2) 입찰공고가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점
- (3) 도면의 분량이 많다는 점
- (4) 낙찰자를 한 업체로 정할 예정이라는 점

7. 가상 공고는 참가요건으로 해당 기술 보유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모두 요구한다. A사는 기술 보유·인력 1명, B사는 기술 미보유·인력 3명, C사는 기술 보유·인력 2명이다. 다른 요건은 같을 때 제시된 참가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A사
- (2) C사
- (3) B사
- (4) A사와 B사

8. 업체가 '우리 제품에 특허가 있으므로 대체 공급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단독공급원 여부를 검토할 때 적절한 질문은?

- (1) 업체가 먼저 연락했는가?
- (2) 특허증의 종이 크기가 큰가?
- (3) 구매 목적을 충족할 대체 기술이나 다른 공급 경로가 실제로 없는가?
- (4) 견적서에 단독공급이라고 직접 썼는가?

9. 입찰공고만 인터넷에 올리고, 이후 입찰서 접수·계약·청구·지급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별도 절차로 운영한다. 전 과정 전자조달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전자조달은 계약 이전 단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2) 공고를 인터넷에 올렸으므로 모든 계약관리 단계가 이미 통합된 것이다.
- (3) 전자조달은 공고를 올리는 기능만을 의미한다.
- (4) 일부 단계는 전자화했지만 조달 전 과정이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전자조달의 도입 성과를 평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문서와 절차의 전자적 기록은 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2) 지리적 제약을 줄여 입찰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다.
- (3) 인쇄·우편·재입력 등 일부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 (4)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패나 부당한 의사결정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1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발견한 담당자가 구매규모와 적용 제도를 검토하지 않고 언제나 바로 주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보완은?

- (1) 해당 계약유형과 납품요구 조건, 필요한 추가 경쟁절차를 확인한다.
- (2)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달라져도 추가 절차는 검토하지 않는다.
- (3) 등록된 상품은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 (4) 종합쇼핑몰의 모든 상품은 같은 낙찰방식으로만 계약되어 있다.

12. 벤처기업이라는 확인만 받은 업체가 모든 판매상품을 지정제품으로 표시하려 한다. 우선 구분할 사항은?

- (1) 기업 확인서 발급일과 최근 납품일만
- (2) 기업의 해당 지위와 개별 제품의 지정·등록 요건
- (3) 회사가 보유한 특허 수와 희망 판매가격만
- (4) 매출액과 직원 수만

13. 목록화 심사에서 신청 제품과 동일한 품목의 식별번호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재의 업무 흐름에 부합하는 처리는?

- (1) 신청 건마다 다른 식별번호를 무조건 만든다.
- (2) 기존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새 업체만 남긴다.
- (3) 기존 번호를 확인하여 통보한다.
- (4) 분류를 매번 새로 만들어 중복 여부를 피한다.

14. 신기술 제품의 공공부문 실증에서 ㉠ 기관이 해결할 현장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기업의 해결책을 받는 방식과 ㉡ 기업이 보유 제품의 적용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을 구별하려 한다. 적절한 연결은?

- (1) ㉠ 제품의 판매실적에서 출발, ㉡ 기관의 확정 납품지시에서 출발
- (2) ㉠ 기관이 성능검증을 면제, ㉡ 기업이 구매계약을 강제
- (3)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 계약대금의 조기 지급
- (4) ㉠ 수요기관의 현장 수요에서 출발, ㉡ 기업의 제품·기술 제안에서 출발

15. 이전 지정기간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목록에 포함된 자재가 있다. 이번 구매는 그 지정기간이 끝난 후 진행되며 차기 지정목록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다. 대상 여부 확인에 적절한 것은?

- (1) 제품명이 같으면 지정기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2) 과거 목록에 있었다면 새 고시에서 제외되었어도 적용 대상이다.
- (3) 차기 지정고시의 적용기간과 품목 범위를 확인해 이번 구매에 적용될 지정을 판별한다.
- (4) 한 번 지정된 자재는 후속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같은 지위를 갖는다.

16. 성능과 사용기간이 같은 장비 A·B를 5년간 사용할 예정이다. A는 구입비 800만 원, 연간 운영비 120만 원, 폐기비 50만 원이다. B는 구입비 1,000만 원, 연간 운영비 60만 원, 폐기비 50만 원이다. 아래 비용만 합산하면 생애주기비용 비교 결과는?

문항의 가상 수치입니다. 할인율, 세금, 잔존가치 및 그 밖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정 평가산식·실제 낙찰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 (1) A 970만 원, B 1,110만 원으로 A가 140만 원 낮다.
- (2) A 1,450만 원, B 1,350만 원으로 B가 100만 원 낮다.
- (3) A 1,400만 원, B 1,300만 원으로 각각 산정된다.
- (4) A 800만 원, B 1,000만 원으로 A가 200만 원 낮다.

17. 기술개발제품 관련 자료에서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구분하려 한다. 약어 연결이 맞는 것은?

- (1) NEP — 신제품인증 / NET — 신기술인증 / GS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2) NEP — 신기술인증 / NET — 신제품인증 / GS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3) NEP — 특허등록 / NET — 신기술인증 / GS — 직접생산확인
- (4) NEP — 신제품인증 / NET — 환경표지 / GS — 우수재활용제품

18. 혁신제품의 현장 적용을 검토하는 중 업체가 “혁신 관련 지원을 받았으므로 적용 가능한 안전 인증과 개별 규제도 모두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검토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 (1) 업체가 자체 작성한 면제 목록을 행정기관의 승인과 같은 효력으로 취급한다.
- (2) 해당 제품에 실제 부여된 특례의 내용·범위와 여전히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한다.
- (3) 혁신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제품별 안전 관련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다.
- (4) 특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법령의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을 멈춘다.

19.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실적을 확인한다. 지정시설이 아닌 일반 판매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 확인된 경우, 추가 확인의 핵심은?

- (1) 제품 외관이 지정시설 제품과 비슷한지만
- (2) 구매기관이 원한다는 이유로 일반제품의 분류를 바꿀 수 있는지
- (3) 해당 납품이 제도에서 인정하는 지정 생산시설·생산물과 구매 경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 (4) 판매회사 대표자의 개인 기부 횟수가 충분한지

20.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사인 간 거래이다. 판매자가 장비를 5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하자 상대방은 “450만 원이라면 사겠다”고 답했다. 민법 제534조에 따른 설명은?

일반 민법이 적용되고 특별법·별도 약정이 없습니다. 국가·지방계약의 계약서 작성요건을 판단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 (1) 가격을 바꾸었으므로 모든 후속 협상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 (2) 원래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450만 원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 (3) 450만 원의 계약이 상대방의 추가 승낙 없이 곧바로 성립한다.
- (4) 5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고 차액은 나중에 자동 감액된다.

21. 재공고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자가 “재공고 수의이므로 처음의 가격·규격 조건을 전부 새로 바꾸어도 된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당초 조건 유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허용되는 변경과 새 절차가 필요한 변경을 나눈다.
- (2) 규격을 크게 낮추더라도 계약금액만 그대로이면 적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 (3) 공고 횟수와 관계없이 모든 조건을 유지하면 수의계약 요건 검토는 불필요하다.
- (4) 경쟁 절차가 두 번 있었으므로 수의계약에서는 조건 변경 제한이 사라진다.

2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없는 국가계약에서 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아직 없다. 국가계약법상 서면계약 확정요건에 관한 설명은?

계약서 작성 생략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적법한 전자서명이 완료된 사례도 아니다.

- (1) 낙찰금액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면 계약서상의 쌍방 서명을 모두 대체한다.
- (2) 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 (3) 업체 한쪽이 서명하면 다른 당사자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 (4)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쌍방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3. 공공조달통계 작성에 관한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교재에 인용된 조달사업법 제9조의 구조에 맞는 것은?

- (1) 조달청의 통계 작성과 수요기관의 관련 자료 제공·연계 협력을 구분한다.
- (2) 모든 수요기관이 국가 전체의 통계를 각각 별도로 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 (3) 통계 제출을 요구하면 비밀보호 등 법령상 예외는 검토할 수 없다.
- (4) 통계는 입찰공고만 모으므로 계약·대금 관련 자료는 관련성이 없다.

24. 조달청을 통한 물품 구매에서 “물품대금”과 “조달수수료”를 구별한 설명은?

- (1) 조달수수료는 공급업체가 제시한 물품 이윤과 항상 같은 항목이다.
- (2) 물품대금이 지급되면 조달수수료의 부과·감면 검토는 필요가 없다.
- (3) 물품 공급의 대가와 조달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근거와 귀속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 (4) 조달수수료는 납품 지체가 있을 때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25. 서로 다른 업체 두 곳이 같은 입찰에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려 한다. 교재의 전자입찰 제출 규정에 따른 검토는?

- (1) 동일 입찰에서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제출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한 컴퓨터의 사용자는 다른 업체의 입찰금액을 대신 결정할 수 있다.
- (3) 공동 사무실이면 관련 제한은 검토 없이 전부 면제된다.
- (4)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면 컴퓨터 관련 제출 제한은 존재할 수 없다.

26. 한 공기업은 민간에 판매할 제품용 원재료와 사내 행정업무용 가구를 각각 구매한다. 상업적 재판매 등 국제입찰 제외 규정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같은 날 발주하면 용도가 달라도 먼저 판단한 계약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 (2) 행정용 가구도 향후 중고로 팔 수 있으므로 모두 재판매 구매이다.
- (3) 공기업이라는 기관의 성격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말고 각 계약의 용도와 해당 제외 요건을 확인한다.
- (4) 공기업이 영업수익을 얻으면 모든 구매가 상업적 재판매 목적으로 간주된다.

27. 당사자 의견 청취를 생략하려는 두 경우가 있다. ㉠ 업무가 바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맞게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적절한 비교는?

- (1) ㉡에서는 응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2) ㉠은 신속한 제재에 도움이 되므로 법적 근거 없이 허용된다.
- (3) 둘 다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생략 사유이다.
- (4) ㉠과 ㉡을 같게 보지 말고, ㉡도 규정상 생략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8. 제한처분 대상 법인이 상호만 바꾸고 법인등록번호·권리의무의 주체는 그대로이다. 새 이름이므로 처분과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단은?

- (1) 유사한 상호를 쓰는 다른 법인도 관계 확인 없이 전부 제재 대상이다.
- (2) 상호가 바뀌면 같은 법인이라도 모든 기존 처분이 자동 소멸한다.
- (3) 상호보다 처분 대상 법인의 동일성과 처분 범위를 확인한다.
- (4) 새 상호로 입찰하면 처분기간이 기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단축된다.

29. 가상 계약은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종료할 때 미정산 선금 800만 원과 약정 반환이자 2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다. 기성 정산 등 다른 채권은 없다고 할 때 반환액은?

가상 정산 약정의 단순 계산이며 이자율이나 모든 계약의 법정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 (1) 20만 원
- (2) 800만 원
- (3) 780만 원
- (4) 820만 원

30.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받는 업체가 “영업이 바쁘므로 참가자격 제한 대신 돈을 내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겠다”고 요구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과징금 제도가 있으면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2) 업체가 돈을 낼 의사를 표시하면 어떤 제재 사유도 자동 대체된다.
- (3) 대체 과징금은 법정 요건·제외 사유와 권한 있는 판단에 따르며 업체의 일방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4)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액수를 합의하면 공식 처분절차가 필요 없다.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한 업체가 입찰공고가 난 뒤에만 사업을 찾아 준비기간이 자주 부족했다. 탐색 시점을 앞당길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수요기관의 공개 발주계획
- (2) 해당 사업의 최종 검사조서
- (3) 낙찰업체의 대금 청구서
- (4) 해당 사업의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32. 제품 생산은 금요일에 끝나지만 수요기관의 지정 인수시설은 월요일에만 입고를 받는다. 공급일정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 (1) 공장 출고일을 인수 완료일과 같다고 기록한다.
- (2) 운송 소요시간과 수요기관의 실제 인수 가능 일정을 함께 반영한다.
- (3) 제품 제조 완료로 계약상 모든 납품 의무가 끝났다고 본다.
- (4) 수령기관의 운영시간은 공급일정과 무관하다고 본다.

33. 신규 업체는 등록 요건은 충족하지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낙찰 후에도 확보하기 어렵다. 공급계획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 (1) 참가 가능 여부와 실제 계약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한다.
- (2) 낙찰되면 필요한 인력이 자동 배정된다고 가정한다.
- (3) 계약 이행능력은 공급업체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 (4)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기술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본다.

34. 불확실한 운송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업체가 기본 예상원가와 같은 금액으로 투찰하려 한다. 비용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 (1) 기본 원가와 같으면 모든 불확실성까지 보전된다.
- (2) 예상 밖 비용을 흡수할 여력과 감내 가능한 손실을 검토한다.
- (3)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계약에서 자동 증액된다.
- (4) 이윤을 0으로 적으면 추가 비용도 0이 된다.

35. 가상 기관의 품목별 연간 지출이 큰 순서대로 A 50, B 30, C 10, D 6, E 4억원이다. 누적 지출의 80% 이상에 처음 도달하는 품목 집합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B와 C
- (2) A와 B
- (3) A부터 E까지 모두
- (4) A만

36. 어떤 품목은 지출비중이 높고 공급위험이 낮았으나, 주요 생산기지 중단으로 공급위험이 높아졌다. 지출비중은 그대로다. 분류 변화는?

- (1) 일상적 품목에서 병목 품목으로 이동
- (2) 레버리지 품목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이동
- (3) 전략적 품목에서 레버리지 품목으로 이동
- (4) 병목 품목에서 일상적 품목으로 이동

37. 정보시스템 구축 규격에 개발 기능은 있으나 사용자 교육과 운영 인수인계의 담당 주체가 없다. 검토할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

- (1) 담당 주체가 없어도 가격과 일정에는 영향이 없다.
- (2) 기능 목록에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인계가 필요 없다고 본다.
- (3) 교육·인계가 과업에 포함되는지와 역할·산출물을 명확히 해야 한다.
- (4) 구축이라는 제목만으로 무제한 운영 업무를 포함한다고 본다.

38. 특정 용역에 필요한 법정 영업허가 대신 일반 품질경영 인증만 제출하도록 규격 초안에 적혀 있다. 업체의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해당 허가의 필요 여부와 품질인증의 기능을 구분해 적정성을 질의한다.
- (2) 품질인증은 모든 법정 허가를 대체한다.
- (3)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면 해당 용역 자체를 금지된 사업으로 본다.
- (4) 인증서가 있으면 관련 법령의 확인을 생략한다.

39. 범용 소모품 구매에서 해당 물품의 성능과 관계없이 “특정 기관에 납품한 실적만 인정”하는 조건이 발견되었다. 법적 근거·필요성은 공고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검토의 출발점은?

- (1) 계약목적과 제한요건의 관련성·비례성 및 적용 근거를 확인하고 정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 (2) 공고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기준 검토를 생략한다.
- (3) 제한이 있으면 모두 위법하다고 확정하고 입찰을 중지시킨다.
- (4) 경쟁자가 줄어드므로 관련성이 없어도 그대로 인정한다.

40. 업체가 요구 금액·기간을 충족하는 증권을 준비했으나 증권에 적힌 공고번호가 다른 입찰의 번호이다. 적절한 제출 전 검토는?

- (1) 낙찰 후에만 공고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 (2) 이번 입찰을 보증하는 유효한 증권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재발급을 완료한다.
- (3) 표지에 이번 공고번호를 손으로 덧쓰면 보증계약도 자동 변경된다.
- (4) 금액만 같으면 어느 입찰의 증권이든 사용할 수 있다.

41. 설비 교체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현장에 대한 작업 가능시간·차량 진입 높이·전원 차단 가능시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가장 필요한 요청은?

- (1) 낙찰 전에 계약목적물을 임의로 설치해 본다.
- (2) 조건은 현장마다 달라도 인건비만 같으면 되므로 확인하지 않는다.
- (3) 해당 제약조건의 공식 확인 또는 공정하게 제공되는 현장설명·방문 기회이다.
- (4) 제약이 없다는 문장을 업체가 작성해 공고를 대신한다.

42. 국가계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아닌 구성원 한 명에게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제44조제2항의 무효 적용범위만을 묻는다면?

- (1) 조항에 따라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입찰을 자동 무효로 한다.
- (2) 무효사유가 없는 구성원을 대신 무효 처리한다.
- (3) 대표자가 아니므로 무효사유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 (4)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43. 가상 전자입찰 규칙은 이미 선정된 네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사용한다. 네 값이 9,800만·9,900만·1억·1억100만 원이라면 예정가격은?

네 가격의 선정은 완료되었으며 표의 산술평균만 묻습니다.

- (1) 1억100만 원이다.
- (2) 9,950만 원이다.
- (3) 3억9,800만 원이다.
- (4) 9,800만 원이다.

44. 정보시스템 사업은 보안·데이터 이전·운영전환을 모두 포함한다. 평가위원 후보가 한 분야에만 편중되어 다른 핵심 과업을 검토하기 어렵다. 구성 단계의 보완으로 적절한 것은?

- (1) 후보자의 직급이 높으면 과업 관련 전문성 확인을 생략한다.
- (2)위원의 전문분야가 부족한 항목은 공고된 배점에서 사후 삭제한다.
- (3) 해당 업체의 영업담당자를 위원으로 포함해 누락 분야를 대신 설명하게 한다.
- (4) 적용 규정에 따라 주요 평가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확보한다.

45. 평가위원 후보자가 평가대상 사업의 수주 결과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평가대상 사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은 확정합니다. 특정 기관의 제척기간 숫자는 묻지 않습니다.

- (1) 유리한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개인 약속만 남기고 독자적으로 참여한다.
- (2)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용 기준에 따른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서 배제되도록 처리한다.
- (3) 전문성이 높으면 이해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 (4) 평가점수를 다른 위원과 같게 주면 관계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46. 가상 기준은 마감 전 이미 충족한 실적의 증빙 누락만 보완하도록 허용하고 마감 후 새 실적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완 가능한 사례는?

보완 허용범위와 기한은 가상 심사규칙이며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다른 업체의 실적을 자사 실적으로 바꾸어 기재하는 경우이다.
- (2) 실적기준 자체를 자사에 맞게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 (3) 마감 전 완료된 인정대상 실적에 대해 빠진 증명서를 정해진 보완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 (4) 마감 후 처음 준공된 공사로 부족했던 실적을 채우는 경우이다.

47. 가상 희망수량 구매에서 필요수량은 200개, 허용 최고단가는 1만 원이다. A는 9,000원·100개, B는 10,500원·200개, C는 9,800원·80개를 제시했다. 허용 단가 이하 물량만 배정할 수 있을 때 미충족 수량은?

학습용 가상 단가 상한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변경이나 별도 후속 계약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1) 120개
- (2) 100개
- (3) 0개
- (4) 20개

48. 가상 종합심사에서 모든 필수요건을 충족한 A는 가격 58·수행능력 30점, B는 가격 54·수행능력 37점이다. 합계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는 조건에서 판단은?

가상의 단순 합산방식입니다. 다른 필수요건·가감점·동점은 없습니다.

- (1) B가 91점으로 A의 88점보다 높아 선정된다.
- (2) 가격점수가 높은 A가 합계와 관계없이 선정된다.
- (3) 두 업체 모두 100점이 아니므로 선정할 수 없다.
- (4) 수행능력점수는 공개할 필요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49. 낙찰 평가 때 제안된 무상 유지관리 기간은 3년인데 최종 계약 초안에는 1년으로 적혀 있다. 적법한 기간변경 합의는 없었다. 계약체결 전 확인할 것은?

- (1)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되므로 어떤 축소도 자동 허용된다.
- (2) 계약금액이 같으면 이행조건 불일치는 중요하지 않다.
- (3) 제안기간이 길수록 유지관리 의무가 오히려 짧아진다.
- (4) 평가·선정의 근거가 된 제안과 계약 초안의 불일치를 바로잡는다.

50. 가상 절차에서 점수 합산 누락이 확인되었고 이의신청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요청사항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신청 가능성과 오류는 가상 사례에서 인정되어 있으며 특정 법정 구제수단의 자동 인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규정된 점수와 무관하게 자신을 바로 낙찰해 달라는 것이다.
- (2) 다른 모든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 (3) 누락 항목의 산식 재확인과 공식 절차에 따른 재산정·순위 검토이다.
- (4) 전체 자료를 없어서 처음 평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계약관리

51.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특약이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에서 부당특약 해당성은 이미 판단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계약 전체의 무효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1)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입기 전에는 특약의 효력을 검토할 수 없다.
- (2) 서명이 있으면 부당한 특약도 예외 없이 유효하다.
- (3) 부당한 특약이 있으면 별도 검토 없이 모든 조달계약이 소멸한다.
- (4) 당사자가 서명했더라도 해당 부당한 특약은 무효이다.

52. 착수회의에서 장비 배치안은 확정했으나 운영시간 확대 요청은 추가비용 검토가 필요해 합의하지 못했다. 회의록 작성으로 적절한 것은?

- (1) 회의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운영시간 확대도 합의된 의무로 적는다.
- (2) 미합의 사항은 기록하면 분쟁이 생기므로 모두 삭제한다.
- (3) 배치안은 확정사항으로, 운영시간 확대는 담당자·검토기한이 있는 미합의 사항으로 분리한다.
- (4) 배치안까지 미확정으로 바꾸어 모든 업무를 일괄 보류한다.

53. 기관의 요구규격·수량·이행기간과 현장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공급자가 입찰 때 자체 원가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한다. 기본적인 검토는?

기망·중대한 계약문서 오류 등 별도의 법률상 구제사유와 실제 물가·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 (1) 입찰자의 계산착오만으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한다.
- (2) 이익이 예상보다 줄었으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 (3) 착오액을 물가변동률로 바꾸어 같은 금액을 증액한다.
- (4) 기관이 규격을 다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54. 변경 요청에는 센서 10개 추가와 화면 기능 2개 추가가 포함되었다. 최종 변경계약은 센서 10개만 추가하고 화면 기능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새 이행계획에 반영할 범위는?

제시된 변경계약이 최종 유효 문서이며 별도 추가 합의는 없습니다.

- (1) 일부가 제외되었으므로 센서 추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 (2) 최초 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반영한다.
- (3) 화면 기능을 추가하되 검수 때만 숨기면 계약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 (4) 승인된 센서 추가와 그에 따른 일정·금액을 반영하고 제외된 화면 기능을 확정 의무로 넣지 않는다.

55. 학습용 손해 산정 규칙은 미이행 부분의 약정대가에서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될 원가와 동일 자원의 대체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뺀다. 약정대가 1,000만 원, 절감된 원가 700만 원, 대체 사용 이익 50만 원이며 다른 손해는 없다. 이 규칙의 산정액은?

배상책임과 공제 범위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의 손해액·배상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1) 300만 원이다.
- (2) 1,750만 원이다.
- (3) 250만 원이다.
- (4) 1,000만 원이다.

56.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정산안 1개를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수락하지 않았다. 별도의 강제 효력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가?

법정 간주수락·강제조정 규정이 없는 자율적 조정 사례입니다.

- (1) 조정인이 숫자를 제시하면 그 순간 확정된 정산합의가 된다.
- (2) 정산안이 제시되었으나 수락 합의는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한다.
- (3) 중재가 아니어도 어떤 조정안이든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 (4)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57. 계약이행 위험에 대비해 ㉠ 생산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 고장 발생 시 대체 설비를 투입하는 절차를 준비했다. 두 조치의 성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과 ㉡은 모두 위험 발생 이후에만 시작하는 사후 조치이다.
- (2) ㉠을 실시하면 ㉡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지고 위험은 소멸한다.
- (3) ㉠은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은 발생 후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 (4) ㉡을 준비하면 기존 설비의 예방점검은 불필요하다.

58. 가상 지급규칙은 검사 전 적법하게 접수한 청구는 검사 완료일, 검사 후 청구는 청구 접수일을 지급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A는 2일 청구·5일 검사 완료, B는 5일 검사 완료·8일 청구이다. A와 B의 기준일은?

검사 전 청구가 적법하게 허용되었으며 날짜는 같은 달의 가상 날짜입니다.

- (1) A는 2일, B는 5일이다.
- (2) A는 5일, B는 8일이다.
- (3) A와 B 모두 2일이다.
- (4) A와 B 모두 물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59. 보증기간 중 동일 부품이 세 차례 고장 나 그때마다 교체했으나 원인 분석은 남기지 않았다. 사후관리 개선으로 적절한 것은?

- (1) 사용 중 고장이므로 계약상 하자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외한다.
- (2) 교체 횟수만 늘리면 같은 결함의 재발 여부는 관리하지 않는다.
- (3) 고장·조치 이력을 연결해 재발 원인을 분석하고 계약조건에 맞는 지속적인 시정방안을 검토한다.
- (4) 부품을 한 번 교체했으면 남은 보증 의무는 자동 소멸한다.

60. 교재의 시공자 부보방식을 적용한다. 시공자가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료는 공사 원가와 계약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바른 설명은?

- (1) 시공자가 납부했으므로 공사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보험계약 체결·납부의 주체는 시공자이고, 보험료는 공사대가를 통해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다.
- (3)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명의로 언제나 발주기관이다.
- (4) 보험료를 원가에 넣으면 실제 보험 가입 절차가 면제된다.

61. 등록사항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만 별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표시된다. 업체는 “조회되므로 유효기간은 관계없다”고 판단한다. 교재 설명에 따른 검토는?

- (1) 조회 가능한 등록기록의 존재와 현재 유효한 등록 상태를 구분하여 갱신·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 (2)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모든 과거 등록은 영구히 유효하다.
- (3) 만료일 표시가 있어도 출력물을 새로 인쇄하면 기간이 갱신된다.
- (4) 유효기간은 계약대금 지급일에만 확인하고 입찰 준비에서는 보지 않는다.

62. 공고가 기술자료를 가격입찰서의 필수 첨부서류로 전자 제출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다른 부서에 홍보자료를 보낸 뒤 필수 첨부는 비워 두었다. 참가 준비 점검으로 적절한 것은?

- (1) 기관의 어느 직원에게든 자료를 보냈다면 공식 첨부 제출과 같다.
- (2) 가격이 가장 낮으면 부속서류 제출 조건은 자동 면제된다.
- (3) 요구한 자료를 공고가 정한 제출 경로·형식·기한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 (4) 홍보자료의 분량이 많으면 누락된 기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63. 적법한 소액수의계약에서 전자적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한다. “견적을 여러 개 받았으므로 계약방법은 언제나 일반경쟁입찰로 바뀐다”는 설명에 대한 판단은?

- (1)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견적을 두 개 이상 받을 수 없다.
- (2) 업체가 두 곳 이상이면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일반경쟁입찰이다.
- (3) 견적 경쟁을 활용하더라도 적용 근거가 소액수의계약이면 그 계약방법과 절차를 구분해 이해한다.
- (4) 전자적으로 견적을 받으면 계약서 없이 자동 증여가 이루어진다.

64.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운송서류·상업송장 등을 심사하여 대금을 처리했다. 담당자는 이 사실만으로 장비의 계약상 성능도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적절한 구별은?

- (1) 대금이 결제되면 공급자는 어떤 계약상 성능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2) 신용장 관련 서류 심사와 실제 물품의 계약 적합성 검사는 별도의 확인이다.
- (3) 검사가 필요하면 신용장에 따른 서류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4) 은행의 서류 심사는 실제 장비의 모든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65. 제조 장비의 내부 접합부는 완성 후 외관검사만으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 적용 계약조건상 제조 과정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적절한 품질관리 방향은?

공정 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조건을 전제합니다. 의무검사 대상이나 비용 귀속은 묻지 않습니다.

- (1) 검사가 가능해도 완성 뒤 사진만으로 모든 항목을 확인한다.
- (2) 제조 과정 점검을 하면 계약 규격 확인은 필요 없다.
- (3) 완제품 겉모양이 비슷하면 내부 품질도 같다고 판단한다.
- (4) 중요 제조공정의 검사·시험 시점과 기록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66. 제안서의 “지원기술·사후관리” 부분이 회사 연혁과 수상경력만으로 채워져 있다. 해당 평가 주제에 맞는 보완은?

- (1) 문제 접수 창구, 분석·복구 절차, 지원 인력과 지속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 (2) 수행방법 대신 경쟁업체의 광고 문구를 인용하여 비교 없이 제출한다.
- (3) 회사 설립일을 더 크게 표시하면 장애 대응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 (4) 과거 수상경력이 많으면 유지관리 업무는 계약에서 자동 제외된다.

67. 용역 제안발표에서 발표자는 유창했지만 장애 대응계획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계산이 없다. 평가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 (1) 질문에 대답한 횟수만 세면 모든 평가항목을 점수화할 수 있다.
- (2) 발표가 매끄러우면 수행계획의 공백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3) 발표의 표현력과 공고된 기술·수행계획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근거를 기록한다.
- (4) 계산 자료가 없으면 해당 평가기준과 무관하게 가격점수까지 임의 삭감한다.

68. 교재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분야별 수행능력 표에서 보험 용역과 임대차 용역에 제시된 평가분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재의 분야별 평가항목 구별을 묻는다. 배점·적용금액·현행 세부기준은 별도 확인 대상이다.

- (1) 보험 — 공사 시공경험 / 임대차 — 보험금 지급능력
- (2) 보험 — 보험금 지급능력 / 임대차 — 경영상태와 사후관리(A/S)
- (3) 보험 — 여객운송 차량대수 / 임대차 — 설계공모안의 예술성
- (4) 보험 — 연구보고서 발간실적만 / 임대차 — 보유 특허 수만

69. 쇼핑몰의 두 상품명이 “현장 안내 키오스크”로 같지만 한 상품에는 실외 방수함이 없고 다른 상품에는 포함된다. 비교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1) 계약된 세부 규격·구성품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설치조건을 대조한다.
- (2) 싼 상품을 주문한 뒤 누락 구성품은 모두 무상 추가라고 통보한다.
- (3) 상품명이 같으면 구성품도 같은 것으로 확정한다.
- (4) 이미지가 같으면 문서상의 구성 차이는 무시한다.

70. 다음 활동을 MAS의 기본 흐름에 맞춰 연결한 것은? ㄱ. 적격성 검토와 가격협상 ㄴ. 조달청과의 계약 및 상품 등록 ㄷ. 수요기관의 상품 검토와 필요한 경쟁 절차 ㄹ. 납품요구·이행

세부 공고·자료제출 등 중간 절차를 축약한 기본 흐름입니다. 모든 납품요구가 2단계경쟁 대상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1) ㄷ → ㄹ → ㄱ → ㄴ
- (2) ㄱ → ㄷ → ㄹ → ㄴ
- (3) ㄱ → ㄴ → ㄷ → ㄹ
- (4) ㄴ → ㄹ → ㄱ → ㄷ

71. 가상 적격성 규칙은 신용등급 “B 이상”을 요구하며 순서는 $A > B > C$ 로 정했다. X는 B, Y는 C이고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 이 등급요건만의 판단은?

A·B·C 순서와 기준은 모두 가상이다. 실제 규정의 B- 등급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다.

- (1) X는 충족하고 Y는 충족하지 않는다.
- (2) B는 기준과 같으므로 X도 탈락한다.
- (3) Y는 C로 낮으므로 X보다 더 적격하다.
- (4) 등급은 문자여서 기준 비교에 사용할 수 없다.

72. 계약이행실적평가의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반올림 전 점수가 92.12345점이면 기록할 점수는?

점수는 가상이며 문제에 명시된 반올림 규칙의 적용을 묻는다. 서로 다른 평가제도의 반올림 자릿수를 혼용하지 않는다.

- (1) 92.1234점
- (2) 92.123점
- (3) 92.124점
- (4) 92.1235점

73. 교재가 인용한 카탈로그계약 규정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일반적인 복수 대상자 계약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교재의 계약대상자 수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비교한다. 실제 적용 전 선정 상태와 현행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 (1) 디지털서비스의 1인 특례를 적용하면 어떤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할 수 없다.
- (2) 일반 상품에 디지털이라는 홍보 문구를 붙이면 모두 1인 계약 특례가 적용된다.
- (3) 이 특례는 계약대상자가 1인이어야만 모든 카탈로그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 (4) 해당 특례의 요건을 갖춘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구별한다.

74. 기계설비와 전기공사를 적법하게 분리 발주하려 한다. 기계 시운전은 전원 인가 후에 가능하지만 두 발주안 모두 접속점의 인계 조건과 통합 시운전 담당이 비어 있다. 발주 준비에서 보완할 것은?

분리발주의 적법성은 확정되어 있으며 전원 공급이 기계 시운전의 선행조건입니다.

- (1) 계약이 분리되면 두 공종은 기술적으로도 독립되므로 접속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
- (2) 각 계약의 최종 준공일만 같으면 중간 인계와 시운전 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 (3) 접점 업무를 계약서에서 모두 빼면 각 업체의 분쟁 가능성도 없어진다.
- (4) 계약별 업무 경계와 접속점 인계 시점·책임, 통합 시험의 역할을 서로 연결해 명시한다.

75. 가상 공사 공고는 PQ 신청을 5일까지, 통과자의 가격입찰을 15일까지 받도록 정했다. 업체는 가격입찰 마감만 달력에 적고 PQ 신청은 10일에 하려 한다. 참가 일정표의 오류는?

5일·15일은 법정 공고기간이 아니라 해당 가상 공고의 확정 일정입니다.

- (1) PQ 신청을 가격 개찰 뒤에 해야 사전심사가 된다.
- (2) 가격입찰 마감일만 지키면 PQ 적용 공사에서도 사전심사가 면제된다.
- (3) 가격입찰이 15일이면 공고된 모든 선행 신청도 15일까지 가능하다.
- (4) 가격입찰보다 앞선 별도 PQ 신청기한을 놓치고 있다.

76. 공사 PQ를 통과한 업체가 “이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홍보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능에 맞는 판단은?

- (1) PQ 통과는 공사 대금 전액 지급 승인을 뜻한다.
- (2) 입찰 참여를 위한 사전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이후 입찰·낙찰 절차와 구별한다.
- (3) PQ는 준공 후 완성된 시설의 하자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 (4) PQ를 통과하면 입찰가격을 제출하지 않아도 항상 계약자가 된다.

77. 학습용 가격평가에서는 비율을 “(입찰가격-A)÷(예정가격-A)”로 계산한다. 예정가격 100, 입찰가격 91, 공통 공제값 A=10일 때 비율은?

동일 단위의 가상 수치와 명시된 식만 적용합니다. A의 법정 구성항목·현행 요율은 이 문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1) 90%
- (2) 91%
- (3) 101.1%
- (4) 81%

78. 가상 전문성 지표를 “대상 세부공종 실적÷그 지표에서 정한 같은 업종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다. 대상 공종은 600억 원, 같은 업종 전체는 1,200억 원, 다른 업종까지 포함한 회사 전체는 2,000억 원이다. 지표는?

실적과 산식은 가상이며 중복 실적·기간 차이는 없습니다.

- (1) 60%
- (2) 30%
- (3) 200%
- (4) 50%

79. 공사 공정보고에 적힌 월별 실적은 증가했지만 현장사진과 인력·장비 투입기록은 모두 전월 자료를 그대로 붙였다. 보고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로 적절한 것은?

가상 보고서의 자료 정합성을 묻고 월별 보고 의무의 적용 범위·제출기한은 묻지 않습니다.

- (1) 보고기간의 실적, 공정별 투입기록, 변경사항과 현장사진이 서로 맞는지 대조한다.
- (2) 사진이 첨부됐으므로 실제 촬영시점과 공정은 확인하지 않는다.
- (3) 금액 합계만 맞으면 보고기간이 다른 사진도 그대로 인정한다.
- (4) 투입인력 기록은 공정과 무관하므로 보고자료에서 모두 제외한다.

80. 가상 시스템의 이번 승인 지급계획은 총 1억 원이다. 하도급대금 4천만 원, 자재·장비대금 2천5백만 원, 근로자 임금 1천5백만 원이 구분되었고 나머지가 원도급자 몫이다. 원도급자 몫으로 대조할 금액은?

가상 금액이며 항목은 중복되지 않고 다른 공제·유보·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 (1) 2천만 원
- (2) 1억 원
- (3) 8천만 원
- (4) 6천만 원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